

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,
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
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제정된 '중대재해기업처벌법'

그러나 정부는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무력화 시키려고 합니다

핵심 대책 외면한 채,
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 주는
시행령 입법 예고...



시행령 문제점

- ▶ 2인 1조,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 인력과 예산 확보 등 핵심 대책 누락
- ▶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하청,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 경영책임자 의무에 대해서 적정 비용, 인력 등은 제외
- ▶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안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만 한정
- ▶ 경영책임자 처벌 면죄부 주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점검 민간 위탁 허용
- ▶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은 일부 급성중독만 적용
- ▶ 화학물질 폭발, 누출, 중독에 의한 시민재해 법 적용 무력화
- ▶ 광주 건설 현장 붕괴 참사 등 반복되는 시민재해 적용 대상 제외

입법예고 의견서 보내기

- 제출기한 : 8월 23일 18시
- 제출방법 : 서면 우편, 전자우편, 팩스
- 주소 :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(중앙동)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공공형사과 (13809)
 - 전자우편 : cjw6233@spo.go.kr
 - 전화번호 : 02) 2110-3280
 - 팩스 : 02) 3480-3555

노동자 시민의 10만 국민동의청원 투쟁, 산재 재난 참사 유족과 수만 명의 동조 단식투쟁으로 쟁취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하는 정부에 맞서 제대로 된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요구합니다!

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필요합니다.

산재사망 노동자

- 1 2인1조, 과로사 예방
적정인력 확보**
 - '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인력 및 예산'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'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'으로 협소하게 규정.
 - 2인1조 근무 작업과 과로사 방지 및 안전작업을 위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.
- 2 하청, 특수고용
경영책임자 의무
전면 적용**
 -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시행령에서 하청, 특수고용노동자 적용사항이 별도 규정하고 있음.
 -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정확한 명시 필요.
- 3 근로기준법 등
안전보건관계 법령
준수의무 부여**
 -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만 한정.
 - 관계 법령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과로사, 일터 괴롭힘 등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관련 법령 반영 필요.
- 4 법령 준수 점검 민간
위탁 금지**
 - 경영책임자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 및 보고를 해야함.
 - 경영책임자가 처벌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법령 의무 이행 점검 민간 위탁 조항 삭제 필요.
- 5 직업성 질병
전면 적용**
 - 법에선 사망, 부상, 질병 모두가 대상으로 포함하지만 시행령에서 직업성 질병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질병 종류를 협소하게 제한.
 - 직업성 질병은 기업의 조직적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. 근로기준법, 산재보상보험법에 명시된 전체 목록을 적용 필요.
- 6 시민재해 화학물질
전면 적용**
 - 가슴기 살균제 참사를 비롯한 화학물질 중독에 의한 시민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지만 사고 대비 물질을 97개로만 협소하게 규정.
 - 원료 제조물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적용 필요.
- 7 광주 붕괴 참사 적용**
 - 시민재해는 다양한 공중 이용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없음.
 - 반복되는 재난 참사를 막기 위해 적용 대상 공중 이용시설 범위 확대 필요.